

18년 전 자취 감춘 전북대생 부모의 호소

“경찰, 사라진 기록 진실 밝혀라”

초동수사 부실 의혹 등 제기

18년 전 자취를 감춘 이윤희(당시 28)씨 실종사건의 가족들이 경찰을 상대로 진실규명을 요구했다. 이윤희 씨의 가족들은 16일 전북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 딸 이윤희가 사라진지 올해로 18년째가 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더 이상 딸을 기다릴 수조차 없는 노인이지만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딸을 찾기 위한 모든 것을 하고자 한다”고 운을 폈다.

이들은 현재 장기 실종 상태인 것에는 경찰의 초동수사 실패가 가장 크다고 주장했다.

이 씨의 가족들은 “이윤희가 학교에서 보이지 않자 친구와 이 씨의 둘째 언니는 지구대로 향해 가출인 발생 보고서를 작성했고, 남은 친구들은 원룸의 청소를 했다”며 “경찰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아 남아 있을 수 있던 증거들이 사라져버리게 됐다”고 했다.

이어 “이윤희는 사건 발생 전 2006년 6월 9일 오전 12시 50분께 과외를 마치고 원룸으로 돌아오던 길에 오토바이를 탄 낯치기범에 의해 휴대전화기가 들어있는 가방을 낫기당했다”면서 “실종 이후인 6월 9일 오후 4시 14분께 누군가가 이윤희 휴대전화로 발신한 내역이 있다. 상황은 이윤희 휴대전화기가 발신될 수



지난 2006년에 실종된 전북대학교 수의학과 이윤희 씨의 가족이 16일 전주 시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입구에서 ‘경찰에 의한 이윤희 실종사건 주요 증거의 인멸 관련 진실 규명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없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경찰의 답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윤희의 컴퓨터 사용 기록에는 성추행과 112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경찰은 자동 시스템 복원 지점에 대한 부분만 있을 뿐 사용기록이나 접속기록 및 검색기록 등 더 이상의 컴퓨터 사용기록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전북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로 넘어가기 전 덕진서에서 임의로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가족들은 사실 포렌식 작업 결과 누군가 임의로 기록을 삭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족들은 “올해 87살이 된 저는 이

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막내인 딸도 살아 있다면 47살이 된다. 이윤희의 컴퓨터 관련 사건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반드시 내 딸을 찾고야 말겠다”면서 살아 있는 동안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가족 측은 이날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전북경찰청장 직무박경철을 상대로 전주지검에 직무유기혐의로 고소했다. 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전주완전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청은 “사건 전 반적인 내용을 구두적으로 해명하고 말씀드렸다”면서 “사라졌다고 한 인터넷 기록도 수사자료로 확보해 기

록에 편철한 상태”라고 답했다.

이어 “당시 다방면의 수사를 다량한 수사기법 등을 통해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기도 했지만 이윤희씨를 찾지 못했고 용의자도 추리지 못한 상태”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잊혀져 가던 사건이 시민들에게 환기가 되면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윤희씨 실종사건은 2006년 6월 6일 전북 전주 덕진구 금암동에서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4학년이었던 이윤희씨가 실종된 사건이다.

이윤희씨는 실종 전날인 6월 5일 저녁 자신이 자취하던 금암동 원룸에서 약 1.5km 떨어진 덕진동의 한 호프집에서 교수, 학과 학생 40여명과 중점교회를 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6일 새벽 행사가 끝난 후 새벽 2시 30분께 귀가했는데 그 이후로 실종되어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행방불명 상태다.

실종 3일 전에는 이윤희씨는 누군가의 낯치기로 인해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상태였다. 실종 이후 해당 원룸은 이윤희씨를 찾기 위해 온 친구들이 강이지들로 인해 더러워진 방안을 청소해 현장보존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 이윤희씨의 둘째 언니가 검색한 컴퓨터 인터넷 기록에서는 약 3분간 ‘성추행’과 ‘112’ 등 단어를 검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

법원공탁금 압류·추심 고액 체납자 세금 환수

전북자치도, 대법원 협조 얻어

전북특별자치도가 대법원의 협조를 얻어 체납자 명의의 공탁금 자료를 조사해 300만원 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자의 세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19일까지 공탁금 압류 추심 대상 체납자를 선정한 뒤 대법원에 체납자의 공탁사건 기록 열람을 요청,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법원 공탁금을 압류 및 추심한다고 16일 밝혔다.

법원 공탁금’은 소송당사자가 미해결 채권 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공탁금종류별 체납세금 징수는 변제공탁, 집행공탁, 보증공탁의 3가지로 이뤄지며,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경우 피공탁자의 공탁금 출금 청구권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공탁금 추심의 대부분은 변제공탁에 해당한다.

또한 보증공탁은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압류하는 방식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체납자들의 대법

원 공탁사건기록 열람이 가능함에 따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체납자의 공탁잔액 및 재판종결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먼저 압류 채권 권리분석을 통해 배당 가능 여부를 검토해 추심하기로 했다.

압류된 법원 공탁금 가운데 변제공탁금과 담보 취소로 출급할 수 있는 집행공탁금은 즉시 추심해 체납액에 충당한다는 것이다.

도는 지난해에도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 252명을 대상으로 법원공탁금 3억5,800만원의 징수실적을 거둔 바 있다.

황철호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성실납부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은 반드시 뿌리 뽑을 것”이라며, “상습·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공탁금압류는 물론 재산, 예금, 급여 압류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1차 지방세심의위원회 회를 통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로 정해진 명단공개 대상 337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6개월 간 소명 기회를 주는 중이며, 10월 중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11월 20일 전국 동시

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도내 기초의회 임시회 잇따라 개최

군산시의회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제263회 임시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16일 열린 본회의에는 새만금 태양광사업 의혹 관련 철거하고 엄정한 수사 촉구 건의안을 가결해, 새만금 태양광사업의 의혹의 진상을 밝혀

군산시의 신뢰도 회복과 새만금사업의 당위성을 다시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인 ‘군산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미자 의원) 등 22건의 안건심사와 간담회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군산=이재훈 기자

익산시의회

익산시의회(의장 최종오)가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59회 임시회를 갖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익산시 기업투자 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8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상임위원회별 주요 사업지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중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안은 △익산시 대학생 여학 및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강경숙 의원),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남석 의원),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남석 의

원) 총 3건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조은희 의원은 북부권 전동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동연 의원은 익산시 저출산 및 돌봄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김순덕 의원은 아픈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병원동행·병상돌봄 서비스를 제안했다. 김경진 의원은 부동산 화물터미널 이전을 제안했으며, 송진영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끝으로, 신용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편의 증진 방안 마련에 대해 발언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김제시의회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는 16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9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결, 주요사업장 방문,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의결 등을 진행한다.

시의회는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했다. 이어 17일 용지 정착농원 현장조사 매입사업장 4개소 주요사업장에 방문, 19

일부터 23일까지 5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후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심사위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송촌공간재구조화법 선제적 대응을 통한 지역발전 마련(오승경 의원)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청소년 사이버네티리 교육 촉구(양운업 의원) 순서로 2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며 집행부에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고창군의회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는 1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0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를 갖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고창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고창군 고항사당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총 14건의 의안 심사가 이루어진다.

이어 17일부터 22일까지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창을 가족행복지원센터 신축공사’ 현장 등 총 15곳의 군 주요 사업장을 방문·점검하게 되며, 각 담당 부서로부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조민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으며 제305회 임시회는 24일 제2차 본회의의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인구감소지역 지원 시도의회 간 연대·협력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위 제5차 정기회…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 등 발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는 16일, 전주 한옥마을 일원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제5차 정기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17개 시·도의회 위원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시작으로 전문가 특강 및 토론, 안건협의의 순으로 진행됐다.

국주영은 의정은 환영사를 통해 “지역소멸은 비단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과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며 “지역소멸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지역의 시각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발전 정책이 선행돼야 하기에 위원님들께서 보다 심도있고 애정을 담아 지역소멸을 바라보고, 해법을 모색하는 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16일 전주 한옥마을 일원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제5차 정기회가 열렸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이어진 전문가 특강에서는 전북연구원 김동영 책임연구위원이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 등 발표

사례와 지방소멸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인구정책 국내의 사례, 지방소멸기금 투자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시도의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안건협의를 통해 최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42조2,000억원 규모의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의결하고 중점 이행과제를 발표했으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임을 확인하고, 중앙부처 사업 공모시 인구감소지역을 10% 이상 우선배정할 것과 선정 후에도 세제·재정·금융 등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해 줄 것을 소관부처에 건의했다.

한편,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는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소멸 문제에 대해 지방의회의 공동대응을 위해 작년 5월에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위원회로, 지역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의회 상임위 현장의정활동

행자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지 현지 확인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 현장 방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전북자치도에서 제출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 대상지를 방문해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내수면 어업의 소득을 증대하고 청년층을 유입할 수 있도록 연구, 교육, 창업에서 컨설팅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김제시 백산면에 2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창업 지원동, 교육 실습동, 스마트 양식장 등 11개동 규모로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 센터를 건립하는 것이다.

이날 행정자치위원들은 현장을 찾아 공유재산 취득이 행정수요나 도정 정책에 꼭 필요한 것인지와 사업 대상



부지가 센터 건립 목적을 고려해 볼 때 최적지인지 등에 대해 살폈다.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은 “공유재산은 도민 전체의 공적 재산으로 취득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부지가 적정한지 현장 확인이 필요하며,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환복위, 전북 장애인종합지원센터 방문

“장애인 자립 역량 강화 훈련 지원에 힘써달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제408회 임시회 기간 중인 16일 현지 의정활동으로 전주시 성덕동에 소재한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현지 의정활동은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받고 센터 시설을 시찰·점검하였으며 이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하는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이병철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도내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지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소 장애인들의 자립상담과 장애아 사회적응훈련을 위



한 재활치료 등 장애인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지원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총 사업비 67억1,400만원으로 장애인의 자립 역량강화를 위해 장애인 자립지원, 맞춤형 재활치료, 체험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